

# IPEF 추진 동향과 필라 3(청정경제)<sup>1)</sup> 협력 의제 분석 및 시사점

유 학 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hsyoo7@keei.re.kr)



## 1. 서론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등을 위해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비중 있게 다루게 되었다.

이렇게 대외 전략의 연장선에서 2021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가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공급망, 에너지, 조세 등 4가지 부문(필라, Pillar)의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를 제안하며 동맹국, 우호국 및 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렇게 IPEF는 미 바이든 대통령의 최초 제안 이후 불과 7개월만인 2022년 5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기존의 무역 규범이나 통상 협약과는 다른 다자협력체를 표방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 IPEF의 출범과 추진이 비교적 빠르게 전개되자 국내외에서는 이 새로운 협력체에 대해 많은 전망과 예상이 쏟아져 나왔다.

1) 본고는 신정수, 유학식, 新 에너지국제협력체계 출범에 따른 국내 대응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2022)의 일부 내용을 활용 및 업데이트 하여 작성되었음.

그러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IPEF 최초 제안과 이듬해 공식 출범에 이르는 기간에 미국의 초기 제안에 의존한 추측과 비공식적 선언에 의존한 기사들이나 분석들이 주를 이루었고,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IPEF의 구체적 실체와 의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IPEF는 다소 선언적이기는 하나 그동안에 공개된 공식 문건으로는 가장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을 2022년 9월에 발표하였고, 2022년 12월 초 공식 협상이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청정에너지 분야와 관련 있는 필라 3 부문은 ‘청정경제’라는 표제로 주로 청정에너지 및 감축 기술 등을 협력 의제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IPEF의 최초 제안과 출범 초기에 구체적인 의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쏟아졌던 기사들과 문헌들 이후로 각 필라 별 협력의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또는 보고한 문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필자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에너지부문, 즉 필라 3 ‘청정경제’부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미 IPEF의 협상이 시작되었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의제의 선제적인 분석과 잠재 협력 방향과 협상 전략 등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에게도 IPEF의 추진 동향과 협력 의제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IPEF 논의가 시작된 것이기는 하나, 그 배경에는 수년간 누적되어온 글로벌 경제, 안보, 공급망 논의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오늘날의 IPEF 출범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고의 목적은 IPEF의 추진 배경과 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청정경제’ 분야인 필라 3에서 어떤 협력 분야를 다루게 될 것인지에 대해 2022년 9월에 합의된 장관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일반 독자에게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와 협상 관계자들에게는 필라 3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와 우리나라의 역할 및 대응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본고에서는 제2장에서 IPEF의 추진 배경을, 제3장에서는 IPEF 추진 경과와 구조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필라 3(청정경제) 부문의 의제를 장관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분석하며, 제5장에서는 IPEF 필라 3 협상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 2. IPEF 추진 배경

### 가. 글로벌 무역 및 경제 안보 환경의 변화

#### 1) 규범기반 신자유주의 무역 질서의 약화와 보호주의의 대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 중국의 경제 개혁 및 개방, 1990년대 냉전의 종식을 거치면서 세계의 산업과 무역은 저렴한 비용에 기반하여 국경을 초월해서 공급망을 구축하고 생산기지를 배치함으로써 효율성과 최적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으로 운영되어왔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1995년 세계 무역 기구(WTO) 등 국제기구와 무역 규범은 글로벌 공급망 확대의 기반이 되

었고, 특히 미국은 무역과 투자의 국경 간 장벽을 제거하고 개방적인 규범 기반 무역 체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임금, 글로벌 공급망, 적정 인플레이션의 지속 등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을 지속했던 자유무역 체제의 시대가 저물면서, 최근에는 급격히 신보호주의와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심화되면서 무역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가 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반면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되고 경쟁 국가가 성장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세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며 경제성장을 저하, 교역량 감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고용의 보호와 확대를 위한 산업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WTO 체제 이후 감소해왔던 관세 조치도 다시 강화되는 등 신보호무역주의 국면으로 이행하였다.<sup>2)</sup>

## 2) 글로벌 위기의 촉발과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노출

반복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기존에 신자유주의적 무역 질서 하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특정 국가나 지역, 소수의 공급자에 집중된 결과, 예상치 못한 위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사태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중국에 기반을 둔 공급망들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의약품이나 필수 물품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선진국들의 위생 및 보건, 국민 생활이 크게 위협받자, 효율성에 기반한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성이 부각됨과 동시에 이러한 공급망 취약성을 국가안보에 큰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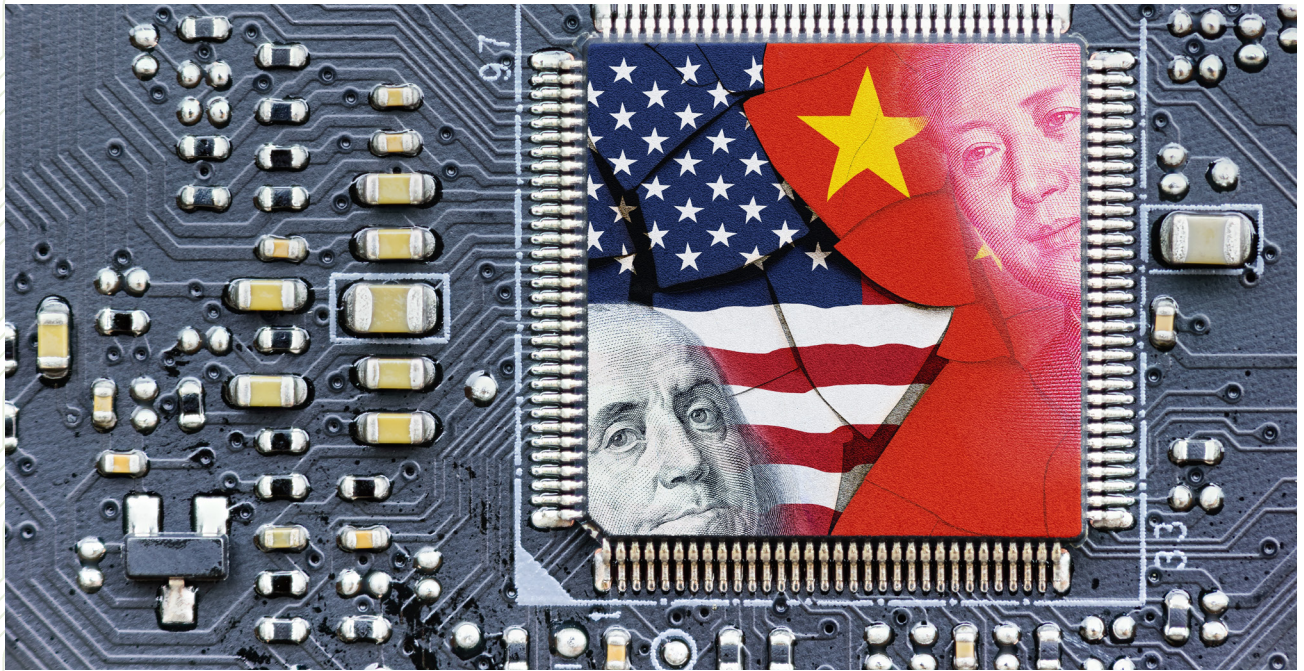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유럽의 에너지시스템과 산업, 그리고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러시아에 의해 무기화된 에너지 자원은 유럽과 세계에 공급 위기를 초래하였고 곡물 수확량과 수출량의 감소, 공급망과 공급 인프라 파괴로 인한 단절 등으로 세계적인 식량 및 원자재 위기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전통적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유럽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유럽은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가속하게 되었다.<sup>3)</sup>

한편, 글로벌 기후변화는 코로나19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달리 새로운 위협은 아니지만,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던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의 목소리는 이제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빈발

2) 김종덕 외. 2019.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19-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양익석 외.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변화와 장·단기 대응 전략. KEEI 이슈 리포트. 에너지경제연구원.





하는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을 경험하면서, 기후변화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거대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금세기 중반까지의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변화 대응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ESG 경영이나 탄소국경조정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무가 확대 및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무역 부문에서의 규제의 한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sup>4)</sup>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정에너지 산업은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주도권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주요국은 청정에너지 공급망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을 추구하면서, 우호 진영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가치의 대립과 미·중 경쟁의 심화

글로벌 G2인 미국과 중국 간에는 2018년부터 무역전쟁이라고 표현될 만큼 대규모 관세 부과와 이에 대응한 보복관세 조치가 반복되는 등 긴장이 커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대만을 둘러싼 정치·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기도 하였으며, 중국을 겨냥하여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법 강화 등으로 미·중 간 긴장은 계속 심화되는 형국이다.<sup>5)</sup> 미·중 간에 10년 넘게 지속되어온 태양광 무역 분쟁이나 반도체와 같은 하이테크 산업 기술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2년 8월, 미국은 연방 의회에서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강력한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섰다.<sup>6)</sup> 또한, 핵심 청정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의 원료가 되는 희토류 자원의 공급망을 중국이 거의 독점할 정도로 공

4) 이상준. 2022. 새로운 통상질서의 한 축, 기후변화. 『통하는 세상 통상』. October. 2022. Vol. 125. 산업통상자원부.

5) 이왕휘. 2021. 코로나19 위기 이후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 연구』. 구자현 편. 한국개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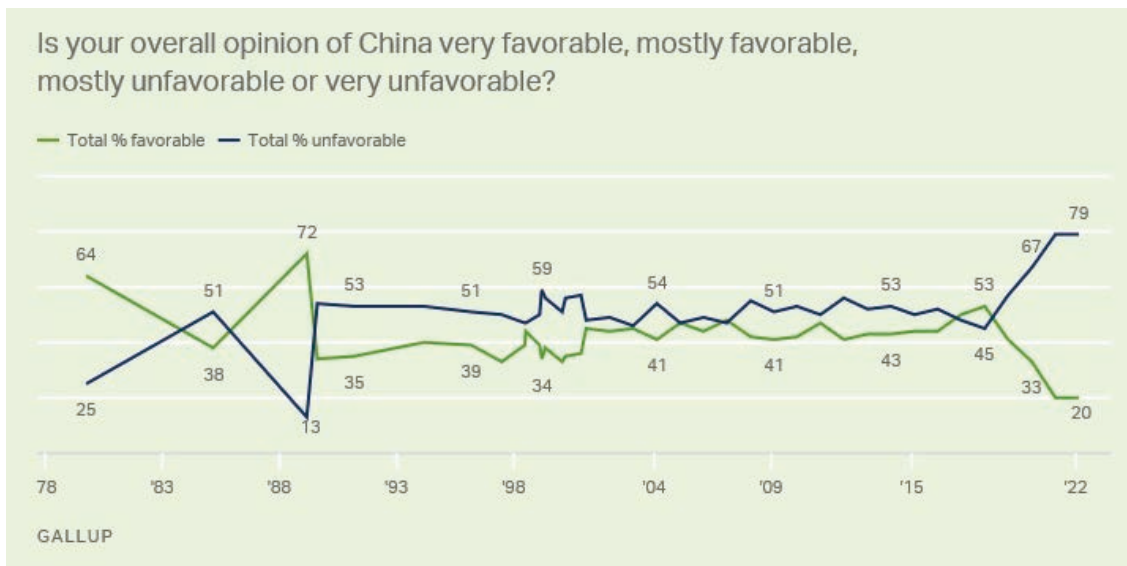
6) 한국은행. 2022. 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22-12호. 9월 23일.



급망 지배력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sup>7)</sup>는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각인시켰다.

아래 그래프는 갤럽에서 매년 조사하는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선호인식 조사로 1979년 조사가 수행된 이래 2022년에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가장 낮고, 비우호적 인식이 가장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긴장을 일반 미국 시민들의 인식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래 큰 변화가 없이 소폭으로만 등락하던 비우호적 인식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된 2018년 이후 크게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선호도 조사



자료: Gallup (<https://news.gallup.com/poll/1627/china.aspx>, 최종접속일: 2023.2.10)

#### 4) 보호주의의 진영화와 신뢰가치사슬 추구

신자유주의적 무역 관행의 쇠퇴와 더불어 최근에 나타나는 보호주의적 조치들은 자국으로의 리쇼어링 정책뿐만 아니라 신뢰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로의 프렌드쇼어링 등 보호주의의 진영화 양상을 띠게 되었다.

먼저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해외에 제조기지를 둔 미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하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對중국 무역수지 개선과 안보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였다.<sup>8)</sup>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러한 동안에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우

7) 김태현, 박지민. 2021. 주요국 핵심광물 확보 전략 분석. 수시연구보고서 21-08. 에너지경제연구원.

8) 박민경 외. 2022.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글로벌 기업 동향. Global Market Report 22-010. KOTRA

려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더욱 커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공급망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서 반도체, 청정에너지,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등 중요 산업에 대한 R&D 지원,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강화,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부품 비중 요건 상향 등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sup>9)</sup>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 또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자국으로의 제조업 리쇼어링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sup>10)</sup>

미국은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인접한 국가들에 생산기지를 입지시키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나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호진영에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 shoring)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프렌드쇼어링은 미국이 공급망을 자국내에만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동맹국 또는 우호 진영에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공급망 전략으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프렌드쇼어링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전개되면서, 공급망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서 안보적 개념의 동맹체제와 경제적 개념의 공급망을 상호 융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주의적 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 및 국가, 또는 소수의 공급자에게 의존할 때 공급망 차질이라는 위험과 공급망 회복력이 위협받는다라는 경험과 인식은 프렌드쇼어링이라는 신뢰에 기반한 신뢰가치사슬을 추구하는 경향을 만들어냈다.

## 5) 경제와 안보의 융합 경향 심화

앞서 프렌드쇼어링을 설명하면서 경제적 개념인 ‘공급망’과 안보적 개념인 ‘동맹’이 결합된 개념임을 언급하였다. 이렇듯 최근의 글로벌 경제와 무역 환경은 다시 안보적 관점과 융합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된 변화로도 이해된다.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과 연결성을 높였으나, 공급망의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인 분포의 결과로 상호의존성이 무기화되어 경쟁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거나,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sup>11)</sup> 경제와 안보의 연계와 융합이 심화된 것은 특히 안보와 국방에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안보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브리프>의 신년 기획 연구로 발표된 이명무·김도훈(2023)에서는 언론

9) 키워드로 읽는 세계경제 재편 이슈. 2022. Cover Story 미리보기. 「통하는 세상 통상」. August. 2022. Vol. 123. 산업통상자원부.

10)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022. Cover Story 정리하기. 「통하는 세상 통상」. August. 2022. Vol. 123.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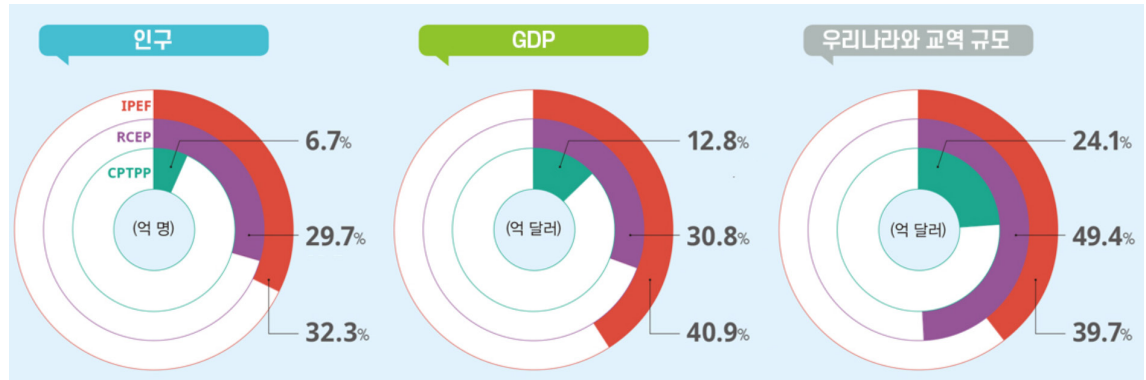
11) 이효영. 2022.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0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총의 50%가 이루어지는 거대 경제권이다.<sup>13)</sup> 또한,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협력 국가들이 위치하는 경제적·기술적 역동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IPEF 참여국들은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 규모가 큰 경제블록을 이루고 있다.

그림 3 CPTPP, RCEP, IPEF의 경제부문 비교



주: 인구와 GDP 통계는 2020년 기준임.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IPEF 출범 시에 참여한 국가 기준. 원자료를 가독성 있도록 일부 편집하였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2a). 「통하는 세상 통상」. June. 2022. VOL.121.

대외교역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경제적인 의미가 더욱 크게 여겨진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대외교역이 GDP의 약 85%를 차지하였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의 약 78%, 총수입액의 약 67%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경제권이다. 북미나 유럽에 비해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20대 교역 대상국의 과반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66%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sup>14)</sup>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해상물류 통로가 다수 존재하며, 우리나라 무역의 상당량이 해상 수송로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동으로부터의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송로는 호르무즈 해협-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를 거쳐 이동하는 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파편화·블록화되어가는 국제 무역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IPEF 등 새로운 역내 협력체제 참여를 통해서 공급망을 강화하고 역내 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13) 대한민국 정부. 202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2022년 12월.

14) 대한민국 정부. 202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2022년 12월.



#### 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앞서 언급하였듯이 IPEF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여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는 다자경제협력 체이다. 미국 정부의 IPEF 추진에는 국가전략 차원의 배경이 명확히 존재하며, 이는 주요 정책 문건에서도 확인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두 달 후인 2021년 3월에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정책의 목표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sup>15)</sup> 그리고 약 1년 뒤인 2022년 2월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되었는데 본 문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핵심이익이 존재하는 곳으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역내 리더십 유지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연결’되고(connected), ‘번영’하며(prosperous), ‘안전’하고(secure), ‘회복력’ 있는(resilient),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을 구축한다는 전략 방향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 중 ‘번영’을 위한 세 가지 대외적 방안을 들었는데, 첫째가 IPEF를 추진하는 것이며, 둘째는 APEC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을 제시하였다.<sup>16)</sup> 그러면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이해관계에 최대한 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2022년 10월에는 「국가 안보전략서」를 발표하여,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장선 상에서 미국의 대외 지역 전략의 방향성을 재확인하였다.<sup>17)</sup> 이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화가 가져다준 막대한 혜택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쟁자이자 무역 대상국인 중국의 부상, 규범과 준칙을

15) The White House. 2021a.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2021.

16) The White House. 2022a.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17) 강석울. 2022.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동북아안보정책분석. 10월 22일. 한국국방연구원.

벗어난 신기술의 개발, 국가 간의 불평등 심화 등 글로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sup>18)</sup> 본 전략서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여러 부문에서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과 다른 형태의 협력체로서 IPEF를 통해 파트너와의 경제 관계를 심화하고자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여러 국가들의 강점을 활용하는 다자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 세계를 만들려는 포용적 연합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이 포용적 연합의 대표적 예로 IPEF를 들면서, 무역 및 디지털 경제, 공급망 및 복원력,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라는 4개 필라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를 위한 규칙을 결정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촉진’이라는 장(章)을 별도 할애하여 미국의 변영은 인도-태평양과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선도하는 국가임을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포용적이고 광범위한 변영을 추진하고 탄력적이고 공정하며 디지털 및 저탄소 경제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키기 위해 IPEF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19)</sup>

### 3. IPEF 추진 경과와 구조

#### 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IPEF 구상과 출범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0월 27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서 처음으로 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IPEF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최초로 공개하였다.<sup>20)</sup> 바이든 행정부는 당시 CPTPP에 가입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하고, 공급망·디지털경제·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간 전략공조 강화를 위해 IPEF 추진 의사를 밝혔다.<sup>21)</sup>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개방되고, 연결되고, 번영하고, 회복력 있고, 안전한 지역을 추구하겠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였다. 바이든은 IPEF에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표준, 공급망 탄력성,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 표준 및 기타 공동 관심 영역에 대한 공동 목표를 정의하게 될 것임을 밝혀 IPEF의 최종 구상을 구체화했다.<sup>22)</sup>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규범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차 강조하고 그 질서에 대한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해상에서의 자유를 지지하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해서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sup>23)</sup>

2022년 2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IPEF의 주요 내용이 곧 공개될 것임을 예고했고, 2022년 5월

18) The White House. 2022b.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2022.

19) The White House. 2022b.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2022.

20) 연원호. 202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우리의 대응 방향. 7월 8일. 이슈브리프. 2022-18. 아산정책연구원.

21) 박선민, 정혜영, 김경화. 2022.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KITA 통상리포트. 2022. Vol.02.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22) The White House. 2021b. Readout of President Biden's Participation in the East Asia Summit. October 27.

23) The White House. 2021b. Readout of President Biden's Participation in the East Asia Summit. October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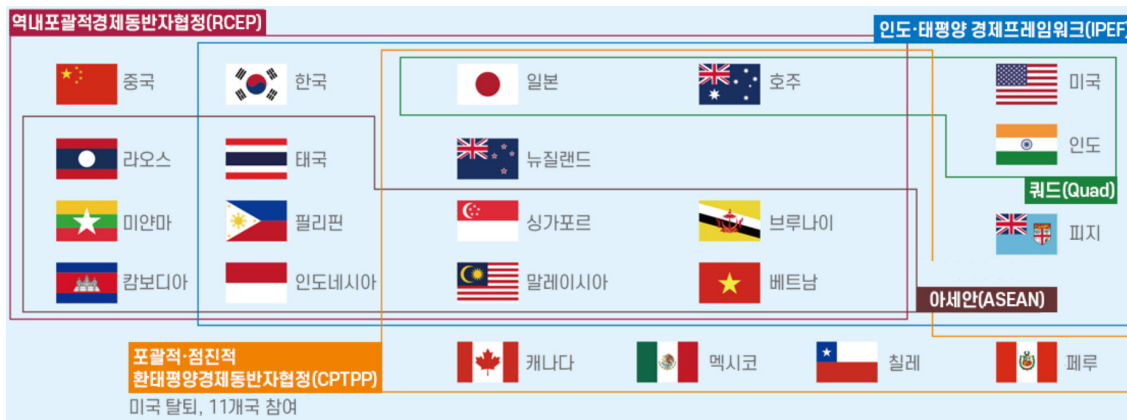


23일, 일본을 공식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IPEF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다.<sup>24)</sup>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초로 IPEF 구상을 제시한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로부터 불과 7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 나. 참여국 현황 및 주요 참여국의 입장

IPEF의 출범과 함께 참여한 국가들은 미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7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피지로 총 14개 국가이다. 아세안 국가 중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IPEF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림 4 IPEF 참여국과 역대 타 다자협력체 참여국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2a), 「통하는 세상 통상」, June. 2022. VOL.121.

주요 참여국별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APEC 등을 통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 확보 많은 공을 들여왔다. 일본은 미국의 우호 진영이자 아태지역의 핵심 선진국으로서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딱히 찾기 어렵다. 미국이 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문제에 관여도를 높여가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환영하는 입장이다.<sup>25)</sup>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2023년 1월, 미국 국제전략 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을 통해 IPEF를 통한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지역 재관여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일본도 IPEF 협상의 조기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sup>26)</sup>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CPTPP 가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하면서, IPEF는 시장접근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CPTPP를 대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27)</sup>

아세안 7개국은 일단 참여하여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공급망, 탈탄소 등 분야에서 경제

2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2022.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40호. 2022-14. 6월 17일. 산업연구원.

25) 박명희. 2022. 안보·경제로 강화되는 미일관계 - 미일 정상회담(5.23)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965호. 6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

26) 한국무역협회. 2023. 일본, 미국 및 유사입장국에 “권위주의 국가 대응 협력 강화해야”. 통상뉴스. 1월 9일.

27) 한국무역협회. 2023. 일본, 미국 및 유사입장국에 “권위주의 국가 대응 협력 강화해야”. 통상뉴스. 1월 9일..

적 실리를 추구하고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IPEF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sup>28)</sup> 그러나 동시에 IPEF가 심각한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띠는 것은 원치 않으며, IPEF 구체화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아세안의 이해를 반영시키면서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sup>29)</sup>

인도는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인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 시장접근 조항이 없는 IPEF에 참여 부담이 크지 않으며, IPEF를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 미국, 한국, 일본 등 첨단 산업 기술 보유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인도는 IPEF에 참여한 타 국가들과 이미 FTA(자유무역협정)나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서 IPEF 참여를 통해서 기존의 협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sup>30)</sup> 하지만 인도는 동시에 IPEF의 4개 필라 중에서 필라 1 무역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으로 2022년 9월 장관급 회의에서 필라 1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도는 필라 1 부문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있다가 협상 합의문의 결과에 따라서 필라 1 참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무역분야에서 ‘환경’ 조항들이 가질 규제적 요소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sup>31)</sup>

호주는 IPEF를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 촉진, 표준 설정 및 공급망 위험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의 기회로 인식하고 IPEF 출범 이전부터 참여에 긍정적인 국가군에 포함되었다. 2022년 3월 호주-미국 간 전략적 상업대화(Australia-U.S. Strategic Commercial Dialogue, AUSSCD)에서 양국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공유된 견해를 반영하는 IPEF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에 동의하였고, 특히 디지털 경제 및 기후 분야에서 IPEF 추진에 대한 기대를 보인 바 있다.<sup>32)</sup>

한편 피지는 어업 및 관광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군소 도서국가로 해수면 상승이나 기후 재난 등 기후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개발도상국이다. 피지는 IPEF에 참여함으로써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지원, 인적 역량 개발, 금융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정부는 IPEF 구상 초기부터 글로벌 다자협력체의 규범 형성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이자 글로벌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협력 확대 등 경제적 이익의 기회로 인식하고 IPEF에 참여하기 위해 조기 대응체제를 구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에 美 상무장관과 유선 협의를 통해 IPEF 관련 논의를 하고, 부처 내에 TF를 구성하여 우리의 실익을 보다 폭넓게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IPEF 대응을 위한 TF는 미국 측의 IPEF 구상 배경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미국 측에서 조만간에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 예상 협력 의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sup>33)</sup> 그리고,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분야별 산학

28) 최인아, 이재호, 신민금, 박나연, 김제국. 2022. 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배경과 전망. 『세계경제포커스』. Vol. 5. No. 21. 6월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 최인아, 이재호, 신민금, 박나연, 김제국. 2022. 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배경과 전망. 『세계경제포커스』. Vol. 5. No. 21. 6월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 윤소연. 202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이 인도에 미치는 영향. 10월 11일.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31) 윤소연. 202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이 인도에 미치는 영향. 10월 11일.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32) 박선민, 이유진. 202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 IPEF,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2022 Vol. 05. 『KITA 통상 리포트』.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33) 산업통상자원부. 2021 산업부, 美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내부 검토 착수. 보도자료. 12월 28일.

연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IPEF는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 규범 및 협력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 태평양 도서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참여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한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sup>34)</sup>

## 다. IPEF 구조와 필라 별 주요 내용

IPEF는 4개의 필라로 구성되며, 각각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를 협력 분야로 하고 있다. 이는 초기 제안과는 일부 수정된 것으로 큰 틀은 변하지 않았으나, 회원국들과의 문안 협상 등을 통해서 조정된 것이다. 각 필라 별 주요 내용과 키워드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필라 3 ‘청정경제’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본 절에서는 2022년 9월 IPEF 장관 공동선언문에 나타난 필라 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표 1 IPEF 필라 별 주요 내용과 키워드

| 구분   | 부문                    | 주요 내용 및 키워드                                                                                                                                |
|------|-----------------------|--------------------------------------------------------------------------------------------------------------------------------------------|
| 필라 1 | 무역<br>Trade           | “팬데믹 이후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농업·식량안보, 노동·환경, 무역 원활화, 투명성 등의 무역규범 및 협력”<br>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농업, 투명성 및 모범적 규제 관행, 경쟁정책, 무역 원활화, 포용성, 기술지원 및 경제협력 등 |
| 필라 2 | 공급망<br>Supply Chains  |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태지역 협력체계 구축”<br>핵심 부문과 핵심 상품 기준 설정, 핵심 부문과 상품의 회복력 증대와 투자, 정보공유 및 위기대응 메커니즘 구축, 공급망 물류 강화, 인력 개발, 투명성 등                    |
| 필라 3 | 청정경제<br>Clean Economy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 모색”<br>에너지안보 및 에너지전환, 우선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수자원·해양솔루션, 온실가스 제거 혁신기술, 청정경제 전환 인센티브                         |
| 필라 4 | 공정경제<br>Fair Economy  | “공정경제 환경 구축을 통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투명성 제고”<br>조세, 반부패, 개도국 지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b.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보도참고자료. 9월 10일.(저자가 일부 수정함)

### 1) 필라 1: 무역(Trade)<sup>35)</sup>

필라 1은 무역분야를 다루며,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농업·식량안보, 무역촉진, 투명성 등에 대한 규범과

34) 산업통상자원부. 2022b.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보도참고자료. 9월 10일.

35) Ministerial Text For Trade Pillar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 Pillar I -Trade (https://ustr.gov/trade-agreements/agreements-under-negotiation/indo-pacific-economic-framework-prosperity-ipef/trade-pillar, 최종접속일: 2023.2.1.)





협력을 추진한다. 일반적인 무역협정이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IPEF의 필라 1은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무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과 식량안보, 통관 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에서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을 논의해 갈 예정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권에 기반한 국내법의 채택과 시행, 노동법 위반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며, 디지털화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이슈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환경법의 효과적 시행과 환경보호 강화, 생물 다양성 보존, 불법 벌목 및 거래 퇴치, 기존 환경협약 의무의 이행, 녹색투자 및 녹색금융 확대,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순환경제 촉진 등에 관하여 무역의 관점에서 협력을 논의하게 된다. ‘디지털 경제’에 관해서는 신뢰성 있고 안전한 국경간 데이터 교류,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성, 지속가능성, 책임성의 강화, 디지털 관련 표준 및 중소기업 협력 등을 논의하게 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의 발전, 토지·물·연료 사용의 최적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 식품과 농산물 무역 투명성 제고, 통관 절차 개선 등으로 식량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경쟁정책’ 분야는 디지털 시장을 포함하여 개방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과 집행에 관한 협력을 다룬다.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무역원활화에 관한 모범 사례 활용, 세관 절차 간소화와 무역원활화 조치의 디지털화, 물류 및 운송 문제 해결,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교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도 무역 분야에서의 포용성 확대와 기술지원 및 경제협력도 다룰 예정이다.

## 2) 필라 2: 공급망(Supply Chains)<sup>36)</sup>

필라 2는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공급망 차질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 품목에 대해서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와 물류 및 인력 개발에 협력기로 하였다.

먼저 ‘핵심 부문 및 핵심 상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국가안보, 보건·안전, 심각한 경제붕괴 예방을 통한 경제회복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 부문을 규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핵심 부문에서 핵심 상품을 정의한다. ‘핵심 부문과 핵심 상품에 대한 투자와 공급망 회복력 증대’ 분야에서는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제조·생산 현대화,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여 역내 산업 역량을 제고하고 공급망

36) Ministerial Text For Trade Pillar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 Pillar II – Supply Chains (<https://www.commerce.gov/sites/default/files/2022-09/Pillar-II-Ministerial-Statement.pdf>, 최종접속일: 2023.2.1.)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정보공유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정부 간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 상황 시 조기 정보와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체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공급망 물류 강화’ 분야는 역내 공급망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력으로 국경·운송의 연결성 확보,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역량 개발, 공급망 내 노동권의 개선,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3) 필라 3: 청정경제(Clean Economy)<sup>37)</sup>

필라 3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청정기술 및 투자 등에 관한 역내 협력을 다룬다.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시장 형성과 투자 확대, 민간의 참여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에너지 안보와 전환’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의 생산과 교역의 확대, 전력망 개선,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 감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우선부문(Priority sector)의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는 감축 중요도가 높은 우선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저배출 상품과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정책,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협력을 논의한다. ‘지속가능한 토지·수자원·해양 솔루션’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및 농업·산림 관리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용수와 비료의 사용, 해양 재생에너지·해운 등 해양 기반 기후 솔루션을 위해 협력하며, ‘온실가스 제거 혁신 기술’ 분야에서는 탄소 포집·활용·운송·저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촉진하고, 시장 및 비시장 솔루션과 관련된 MRV(측정·보고·검증) 협력을 포함한다. ‘청정경제 전환 인센티브’ 분야는 청정경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투자 및 지속가능 금융, 친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신호 강화, 청정조달과 탄소시장 협력, 개도국 지원 등을 다룬다.

### 4) 필라 4: 공정경제(Fair Economy)<sup>38)</sup>

필라 4는 국제협약 및 표준에 따라 국내 법적 체계 내에서 반부패 조치 및 투명한 조세 행정 등 공정 경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유엔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표준 및 OECD 뇌물방지협약의 진전과 이행을 추구한다. 그리고 국내외 뇌물 수수 및 기타 관련 부패 범죄를 예방하고 제재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 수익의 식별과 추적, 회수조치를 강화하고 FATF 기준에 부합하는 법인의 실소유권 및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추구한다. ‘조세’ 분야에서는 기존 국제협약 및 기준에 따라 조세 당국 간 정보교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다루게 된다. 또한, 기술 지원, 역량강화 및 효율적 조세 행정에 관한 협력도 논의할 것이다. 한편, 경제의 디지털화로 발생하는 새로운 조세 이슈도 다루게 된다.

37) Ministerial Text For Trade Pillar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 Pillar III - Clean Economy (<https://www.commerce.gov/sites/default/files/2022-09/Pillar-III-Ministerial-Statement.pdf>, 최종접속일: 2023.2.1.)

38) Ministerial Text For Trade Pillar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 Pillar IV - Fair Economy (<https://www.commerce.gov/sites/default/files/2022-09/Pillar-IV-Ministerial-Statement.pdf>, 최종접속일: 2023.2.1.)

## 4. 필라 3 협력 의제 분석 및 해설

이번 장에서는 필라 3 (청정경제) 부문의 협력의제를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IPEF에서 필라 별 협력분야를 가장 자세히 기술한 문건은 장관 공동선언문이다. 이를 자세히 검토하여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어떤 식의 협력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장관 공동선언문을 요약한 기사나 보도자료 등이 존재하지만, 장관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키워드들과 문장들이 어떤 의미로 선택되었고, 어떠한 협력을 가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한 자료는 없다. 이런 점에서 본고가 필라 3 부문에서의 협력 의제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 장에서는 IPEF 필라 3 장관 공동선언문의 원문을 주요 단락별로 박스 안에 표기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해설과 분석을 기술한다.

### 가. 두문(頭文)

우리<sup>39)</sup>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및 베트남 장관은 우리의 막대한 에너지 및 인프라 수요를 인식하고, 파리협정 목표와 노력에 맞추어, 온실가스 배출 완화 및 제거,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 회복력 및 적응, 지속 가능한 생활 및 양질의 일자리 추구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책 프레임워크, 역량 구축, 기술 지원, 혁신적 재원조달 방식, 민간 파트너십, 플랫폼 및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킬 고품질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협력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및 기후친화적 기술의 연구, 개발, 상업화, 가용성, 접근성 및 보급에 대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채택한 기본 원칙 및 일터에서의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기초하여 양질의 노동, 양질의 일자리 및 노동권의 창출을 통해 공정한 전환의 촉진 필요성을 인식한다. 향후 넷제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공유된 목표와 각자의 경로를 추구하면서, 개발수요를 포함하여 각 회원국의 고유한 여건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 투자, 산업화, 양질의 고용기회를 창출함을 인식한다. 국경 내외에서 상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풍부한 역내 청정에너지 자원과 탄소격리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저배출·무배출 상품 및 서비스 보급을 촉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청정경제 형성에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혁신과 창의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역 등 커뮤니티, 여성과 원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9) 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회원국 장관들을 가리킨다.



장관선언문은 두문에서 참여국들이 인도-태평양 역내 에너지 및 인프라 수요에 맞춰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 에너지 안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협력 형태는 정책 역량 구축, 기술 지원, 파이낸싱,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 R&D, 상용화 및 보급 사업 등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관심 협력 분야는 청정에너지 개발, 탄소격리, 저배출·무배출 상품 및 서비스 보급 등이 될 것이라고 기술되었다. 자세한 협력 분야는 본문에서 제시할 것이므로 두문에서는 더 이상의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았다. 또한, 필라 3 청정경제 부문 협력을 통해서 고용 창출, 노동권의 개선, 공정전환과 포용성에도 관심을 가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주목할 점은 회원국 각자의 넷제로 경로의 추구와 개발수요 등 고유한 여건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구는 IPEF 필라 3의 향후 협상이나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과정이 국가별 여건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일견 판단되는 지점이다. 이는 IPEF에 참여한 국가들의 구성이 선진국, 중견국, 개발도상국, 군소도서국 등으로 다양하며, 청정에너지 여건이나 청정기술 및 산업의 수준 또한 많은 격차가 존재하며,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믹스나 우선 감축 부문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목표나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원칙론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어떤 수준까지 유연성이 허용될지, 또는 어떤 부문이나 어떤 수준에서는 경직적인 조항이 만들어질지는 협상이 본격화될 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에너지 안보와 전환

우리는 에너지 접근성 및 적정가격, 효율 및 절약, 수요 관리, 에너지원 다양성, 에너지 시스템 회복성이 에너지 안보와 전환에 중요함을 인식한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기술보급, 청정에너지 용량·생산·교역의 확대,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촉진(전력망 개선 포함),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과 관련한 정책, 표준, 인센티브 체계, 인프라 투자에 대한 협력과 모범사례 공유를 추진한다. 또한 회원국 각자의 에너지 안보와 전환 목표를 고려하면서,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를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 방안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필라 3의 첫 번째 협력분야는 ‘에너지 안보와 전환’이다. ‘에너지 전환’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분야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는 공급망의 붕괴, 에너지 공급 차질과 가격 급등 등 혼란을 겪으면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을 견지하게 되었다. IPEF 필라 3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에너지 안보와 전환을 균형적으로 함께 다루고 있다. 또한 청정에너지 전환의 주요한 요소인 에너지효율 및 절약, 수요관리 등의 수단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청정에너지원에 대해서는 특정 에너지원을 열거하지 않고, ‘에너지원 다양성’이라고 표현하여, 청정에너지원과 기술이 폭넓게



협력 분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청정에너지로서 협상 문안에서 정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메탄 감축을 언급하고 있는데,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은 주로 석유·가스 시스템에서의 탈루성 배출이 주를 이룬다. 석유·가스의 채굴, 수송, 처리, 저장 등 전 과정에서의 비산 및 누출로 배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연료소비량 등 명확한 수치를 활용하여 배출량 산정이 가능한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비해, 메탄 배출량은 정확하고 일관된 누출 데이터의 관측과 산정이 어렵다. 따라서, 메탄 배출량의 정량화 방법론에 관한 논의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탈루성 배출의 측정 장치 및 모니터링 기술의 개발과 석유·가스 시스템에서의 채굴장비 개선, 누출 방지, 펌프 및 밸브 등의 교체, 공조시스템의 개선 등이 에너지 부문에서의 메탄 배출 감축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장 관련언문에서는 메탄 감축에 관한 정책, 표준, 인센티브 체계, 인프라 투자에 대한 협력과 모범사례 공유를 주된 협력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이런 관점에서의 협력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다. 우선부문 온실가스 감축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후대응과 지속가능 성장 가속화를 위해서, 회원국 각자의 넷제로 경로를 인정하면서, 우선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저탄소·무탄소상품, 서비스 및 연료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책, 인센티브 구조,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조항과 이니셔티브 마련을 추구한다.

‘우선부문’(Priority Sectors)은 문자 그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축 우선순위가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분야는 감축잠재량이 크거나, 감축이 어려워서 추가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 분야, 또는 회원국 간에 협력이나 공조가 감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미국이 초기에 IPEF 필라 3을 제안할 당시에는 주로 감축이 어려운 산업부문(철강, 시멘트 등)의 탈탄소화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만 해도 산업부문 탈탄소화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등장했다. 그러나 IPEF 출범 후 장관 공동선언문의 문구 수정 등 협의 과정에서 다소 포괄적인 표현인

우선부문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우선부문은 반드시 난감축(hard-to-abate)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각 회원국의 여건에 따라 우선부문이 달리 이해될 수 있고, 이후 IPEF 협상에서 공통된 우선부문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최근의 국제적 논의 동향을 고려하거나 미국이 중시하는 감축 부문,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감축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그리고 다양한 청정에너지 발전(發電)부문과 에너지효율 관련 내용이 앞 단락 '에너지 안보와 전환'에 포함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이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부문이나 수송부문(도로, 해운, 항공 등) 등이 핵심적인 감축 우선부문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문에서의 협상은 국가들의 국내 산업 여건이나 감축 기술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경제적 영향 또한 있을 것이므로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구속력 또는 유연성을 부여하게 될지 지켜볼 부분이다.

## 라. 지속가능 토지, 물, 해양 솔루션

우리는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과 해양이 지속가능한 생계, 환경적 책무,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물과 비료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같은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의 촉진을 포함하여 토지 사용에 관한 조항과 이니셔티브를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물 솔루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는 해양 재생에너지 및 해상 수송을 포함한 해양 기반 기후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분야는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과 해양에 관한 청정기술 및 관리를 협력 의제로 삼고 있으며, 동 부문에 대한 조항이나 이니셔티브가 향후 협상에 포함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해양 재생에너지와 해양 기반 기후 솔루션이다. 해양 재생에너지는 잠재력이나 관련된 인프라, 기기 등 산업적 과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이 대표적인 협력 분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양 기반 탄소제거 기술 또한 해양 기반 기후 솔루션으로 폭넓은 기술들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온실가스 제거 기술은 다음 협력 분야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 마. 온실가스 제거 혁신 기술

우리는 각자의 넷제로 경로를 추구함에 있어서, 혁신적이고 내구성 있는 자연기반 온실가스 제거 솔루션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제거 기술의 확대와 비용 감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역내 전역에서 탄소 포집·이용·수송·저장(CCUS) 수요와 공급을 지지하며, 시장 및 비시장 솔루션을 촉진하기 위한 역내 노력을 지원하며, MRV(측정·보고·검증) 표준 체계 마련을 위한 조항과 이니셔티브를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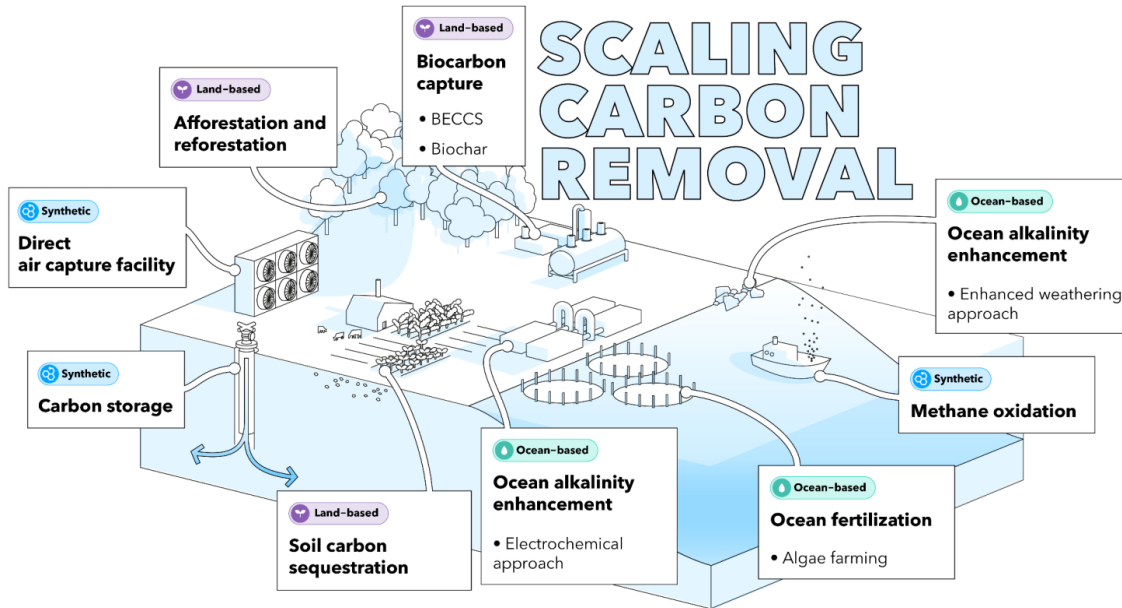
탄소제거 기술은 필라 3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협력 의제이다. 탄소제거는 특정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재사용하거나 저장 및 격리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들을 총칭한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로 불리우는 이 기술은 2050년까지 글로벌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탄소제거 기술은 직접 공기포집(Direct Air Capture, DAC), 지질구조에 저장, 탄소 광물화, 해양기반 탄소제거 등 다양한 기술이 포함될 수 있다. 조립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 또한 대표적인 자연기반 탄소제거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특히 탄소제거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IPEF 필라 3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비용 감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DAC의 경우 현재 이산화탄소 1톤당 500~600달러 수준의 비용이 2030년까지는 200~250달러 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톤당 100달러대 수준으로는 낮아져야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40)41)</sup> 이외에도 지질학적 저장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국경 간 탄소의 이동과 관련한 규제 및 정책, 탄소제거 프로젝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시장 형성, 탄소 제거 및 지질학적 저장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 표준에 대한 협력과 교류가 향후 협상 의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시장 솔루션’은 파리협정 제6조 제8항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는 국가 간 협력에 있어, 지원을 제공한 국가가 그의 대가로 감축 실적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시장 솔루션으로서의 감축 협력은 개도국에 대한 재원조달·기술이전·역량강화 등이 주로 논의된다. 장관선언문에서 탄소제거 기술에 대한 시장적 비시장적 솔루션을 모두 촉진한다고 한만큼, 탄소제거 자발적 시장과 더불어 비시장적 협력까지 모두 협력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0) Garcia D. M. 2022. Direct Air Capture Capacity Soars With New IRA Credits. September 10. BloombergNEF.

41) Daly M., Lluís M. G. D., Curry C. 2022. Scaling Carbon Removal – A Climate Technology White Paper. June 16, 2022. BloombergNEF

그림 5 다양한 탄소 제거 기술



자료: Daly M. et al.(2022)

## 바. 청정경제 전환 인센티브

우리는 청정경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다. 우리는 역내 탄소시장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정부 및 민간 부문 조달을 포함하여 저배출 및 무배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요 조치의 채택을 장려하는 조향과 이니셔티브를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정책화를 지원하고, 안전하고 다양하며 탄력적인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촉진하고, 시범 이니셔티브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역내 개도국 투자에 중점을 둔 민간 파트너십 및 국제 혼합 금융 상품을 통해 민간 및 기관 자본을 동원함으로써, 저배출 및 무배출 프로젝트와 기존 자산을 저배출 및 무배출 자산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지속가능한 금융 동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는 또한 참여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고려하여 청정경제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술협력, 인력개발, 역량 구축 및 연구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필라 3 장관 공동선언문은 또 하나의 중요한 협력 분야로 ‘청정경제 전환 인센티브’라는 표제로 다양한 청정경제 촉진 방안과 관련된 협력을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협력 의제들이 주로 청정에너지 기술 또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이야기했다면, 이 ‘청정경제 전환 인센티브’ 분야에서는 특정 청정기술을 논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수요조치, 민간 파트너십, 금융 동원 방식, 기술 지원, 인력

개발 등 다양한 촉진 방안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을 다루고 있다.

수요조치란 현재 성숙도가 낮거나 수요가 크지 않은 청정에너지 기술이나 청정 상품에 대해서 명정한 현재 또는 미래 수요 신호를 보냄으로써 청정 기술의 개발이나 투자를 촉진하고, 보급 및 상업화를 가속화 하기 위한 조치를 일컫는다. 이러한 수요조치에는 정부의 청정조달 정책, 기업들의 자발적 또는 집단적 구매 약정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정부부문에서 청정 상품을 의무 구매하거나 조달 목표를 설정하는 등 청정조달 정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른바 First Movers Coalition(FMC, 선도기업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FMC는 기업 회원들의 청정제품이나 기술의 구매 서약을 통해서 청정기술에 대해 수요신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연합체이다.

그리고, 정부, 금융기관, 민간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및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를 일으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 모델을 만들고 투자 정책이나 위험관리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고려한 기술지원, 인력개발, 정책지원 등 다양한 지원협력에 대해서도 강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 결론(結文)

필라 3 장관 공동선언문은 또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넷제로 경제를 향한 회원국 각자의 경로를 계획하면서, 공정전환의 맥락에서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과 생산성을 촉진하며 인구의 삶을 개선하는 미래 지향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항과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구하기를 기대합니다.

필라 3 장관 공동선언문은 공정전환에 대한 언급으로 결론을 마무리하고 있다. 공정전환 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술이 없으나,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서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내 청정에너지 정책이나 기후정책에서도 공정전환 의제를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공정전환 의제는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주로 소외되거나 축소되는 산업이나 지역, 예를 들어 석탄발전 같은 분야의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업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청정에너지 일자리로의 재고용이 가능케 하거나, 소외되는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한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 5. IPEF 필라 3 협상 전망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IPEF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미중 경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새롭게 제기된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새로운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미국 정부, 싱크탱크들은 IPEF는 시장개방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무역협정과 다른 어떤 것



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다. 우리나라는 IPEF 제안 초기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경제적 실익과 기회를 최대한 포착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 민간 기업들까지 각종 간담회와 대책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준비를 해왔고, 2022년 5월 IPEF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IPEF 장관 공동선언문 도출을 위한 협의와 협상에 참여했으며, 2022년 12월부터는 본격적인 협정문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IPEF 협상은 우리나라가 국제 규범 형성에 처음부터 참여하는 최초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IPEF 참여국 중에서도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적 역량 등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협력체이더라도 그 안에서 국가 간 경쟁이나 이해득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협상 이슈나 의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는 필수적이다.

필라 3 청정경제 분야로 논의를 좁히자면, 우리가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역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대한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의 노력을 선도할 것임을 표방한 바 있다.<sup>42)</sup>

IPEF 필라 3 참여를 통해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효율 등) 부문의 해외 진출과 협력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역내 탄소시장 발전, 전기차 및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의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 녹색해운, 메탄 감축, 이산화탄소 해외 저장소 확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소, CCUS, 탄소시장 연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 규범, MRV 체계 등 제도적인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비교적 상세히 살펴본 장관 공동선언문은 구체적인 협정문은 아니지만, 최소한 필라 3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의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IPEF 필라 3 부분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경제적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 의제들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수요, 민간의 상업적 실익, 역내 리더십 구축 등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는 산업과 통상, 기후·에너지 이슈와 통상 간의 연계성이 커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주요국들도 산업·통상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고, 이는 IPEF의 대응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역시 산업·통상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IPEF 협상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필라 3 부분에서는 에너지, 산업, 통상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와 협상 대

42) 대한민국 정부. 202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2022년 12월.

IPEF 필라 3 장관 공동선언문은 ‘회원국 각자의 여건을 인정’한다거나, ‘회원국 각자의 넷제로 경로를 인식’한다는 표현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서 미국이 주로 협상 초안을 제시하거나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할 때,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청정에너지 기술이나 감축 기술 등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에너지·기후 논의에서 리더십 국가로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도 글로벌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실질적인 힘과 무역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하였다. IPEF 필라 3 협정문에 핵심 협력 분야별로 회원국 공통의 수량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려 할 경우에는 상당한 협상의 난항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국내 정책과의 조화나 국내 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IPEF 필라 3 협정문의 구속력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강석율. 2022.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10월 22일. 한국국방연구원.
-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022. Cover Story 정리하기. 『통하는 세상 통상』. August. 2022. Vol. 123. 산업통상자원부
- 김종덕 외. 2019.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19-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태현, 박지민. 2021. 주요국 핵심광물 확보 전략 분석. 수시연구보고서 21-08. 에너지경제연구원.
- 대한민국 정부. 202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2022년 12월.
- 박명희. 2022. 안보·경제로 강화되는 미일관계 - 미일 정상회담(5.23)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965호. 6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
- 박민경 외. 2022.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글로벌 기업 동향. Global Market Report 22-010. KOTRA
- 박선민, 정해영, 김경화. 2022.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KITA 통상리포트. 2022. Vol.02.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 박선민, 이유진. 202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IPEF,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2022 Vol. 05. 『KITA 통상 리포트』.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2021. 산업부, 美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내부 검토 착수. 보도자료. 12월 28일.
- \_\_\_\_\_. 2022a. 『통하는 세상 통상』. June. 2022. VOL.121.
- \_\_\_\_\_. 2022b.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보도참고자료. 9월 10일.
- 양익석 외.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변화와 장·단기 대응 전략. KEET 이슈 리포트. 에너지경제연구원.
- 연원호. 202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우리의 대응 방향. 7월 8일. 이슈브리프. 2022-18. 아산정책연구원.
- 윤소연. 202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이 인도에 미치는 영향. 10월 11일.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 이명무, 김도훈. 2023. 신년 기획(1): 2022 아시아 10대 이슈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로 분석한 동북아 주요 관계국의 안보 프레임 변동. 『아시아 브리프』. 3권 1호 (통권 91호). 2023년 1월 16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이상준. 2022. 새로운 통상질서의 한 축, 기후변화. 『통하는 세상 통상』. October. 2022. Vol. 125. 산업통상자원부.
- 이왕휘. 2021. 코로나19 위기 이후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 연구』. 구자현 편. 한국개발연구원.
- 이효영. 2022.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0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2022.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40호. 2022-14. 6월 17일. 산업연구원.
- 최인아, 이재호, 신민금, 박나연, 김제국. 2022. 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배경과 전망. 『세계경제포커스』. Vol. 5. No. 21. 6월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키워드로 읽는 세계경제 재편 이슈. 2022. Cover Story 미리보기. 『통하는 세상 통상』. August. 2022. Vol. 123.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무역협회. 2023. 일본, 미국 및 유사입장국에 “권위주의 국가 대응 협력 강화해야”. 통상뉴스. 1월 9일.
- 한국은행. 2022. 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22-12호. 9월 23일.



## 해외 문헌

- Daly M., Lluís M. G. D., Curry C. 2022. Scaling Carbon Removal - A Climate Technology White Paper. June 16, 2022. BloombergNEF
- Garcia D. M. 2022. Direct Air Capture Capacity Soars With New IRA Credits. September 10, 2022. BloombergNEF.
- Ministerial Text For Trade Pillar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 Pillar I -Trade (<https://ustr.gov/trade-agreements/agreements-under-negotiation/indo-pacific-economic-framework-prosperity-ipef/trade-pillar>, 최종접속일: 2023.2.1.)
- Ministerial Text For Trade Pillar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 Pillar II - Supply Chains (<https://www.commerce.gov/sites/default/files/2022-09/Pillar-II-Ministerial-Statement.pdf>, 최종접속일: 2023.2.1.)
- Ministerial Text For Trade Pillar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 Pillar III - Clean Economy (<https://www.commerce.gov/sites/default/files/2022-09/Pillar-III-Ministerial-Statement.pdf>, 최종접속일: 2023.2.1.)
- Ministerial Text For Trade Pillar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 Pillar IV - Fair Economy (<https://www.commerce.gov/sites/default/files/2022-09/Pillar-IV-Ministerial-Statement.pdf>, 최종접속일: 2023.2.1.)
- The White House. 2021a.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2021.
- \_\_\_\_\_. 2021b. Readout of President Biden's Participation in the East Asia Summit. October 27.
- \_\_\_\_\_. 2022a.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 \_\_\_\_\_. 2022b.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2022.

## 인터넷 자료

- Gallup (<https://news.gallup.com/poll/1627/china.aspx>, 최종접속일: 2023.2.10)

# GLOBAL WARMING

